

“연대와 즉각 대응, 코로나19 산업위기 넘자”

[사람과 현장] 노조 사회역할과 책임, 실천으로 이행하는 동양피스톤분회

4월 1일 오전 경기 안산 동양피스톤 공장 정문으로 대한적십자사 헌혈 버스가 들어섰다. 이날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동양피스톤분회(분회장 황훈재)가 ‘코로나19 혈액 수급난 해소 조합원 단체헌혈’을 벌였다.

황훈재 분회장은 “주조반 소속 조합원이 집단 헌혈을 제안했고, 분회 간부들이 지역 혈액원과 연락해 준비했다”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에 대한 우려로 헌혈 기피 사태가 벌어지자 동양피스톤 노동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동양피스톤분회 단체헌혈은 4월 1일에 이어 7일 한 차례 더 진행한다. 사전신청한 조합원이 120명을 넘었다. 조합원 379명 중에서 1/3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동양피스톤분회 간부들은 “조합원들의 뜨거운 반응에 놀랐다. 고맙다”라며 입을 모았다.

헌혈은 작업장 앞 주차장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했다.

동양피스톤 노동자, 혈액 부족 사태에 따뜻한 헌혈

조합원들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제안했다고 하나, 상황이 상황인자라 분회가 흔쾌히 받아들여 추진하기란 쉽지 않았으리라. 황훈재 분회장에게 어떤 생각으로 ‘동양피스톤 노동자 단체헌혈’을 결정했는지 물었다.

“사실 코로나 19 탓에 물량이 많이 줄었다. 위기 타파를 위해 회사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



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다양하게 생각하다 보니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라며 설명을 시작했다.

황훈재 분회장은 “분회는 일상활동에서 사회연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때마침 조합원들이 헌혈캠페인 아이디어를 주었다.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양피스톤 여러 노동자가 동참한 만큼 노동조합 운동에 좋은 기운을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황 분회장은 “확진자가 워낙 많고 코로나 19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 조합원들이 마음먹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현재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기는데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니 동참하자고 제안했더니 생각보다 많이 응해줬다”라고 말했다.

노동자, 코로나 19 사태 해결 동참

분회는 최근 시흥안산지역지회와 함께 코로나 19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

민들과 연대활동을 벌였다. 헌혈 참여를 위해 분회 사무실에 들른 정현철 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장이 “경기도에 딸기 생산 농기들이 판로가 막혔다는 소식을 듣고 동양피스톤분회 조합원들을 소개했다”라며 “덕분에 딸기 농기들이 위급한 상황을 넘겼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동양피스톤분회가 생각하는 사회연대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 황훈재 분회장은 “‘함께 살자’는 것이다. 이번 헌혈캠페인과 농가 지원은 ‘함께 살자’라는 연대 정신에서 시작했다”라며 “분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연대는 미조직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양피스톤 노동자들은 2019년 3월 24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안산공장 생산직 노동자 98%가 동양피스톤분회 조합원이 됐다. 사무직 노동자도 가입 대상이다. 황훈재 분회장은 “동양피스톤 노동자라면 누구나 금속노조와 함께한다”라며 “사무직 노동자 조직화 계기를 꾸준히 만들고 있다”라고 내세웠다.

황훈재 분회장은 “동양피스톤 안산공장에 650여 명이 일한다. 작지 않은 규모다. ‘기업노조로 가자, 왜 분회냐’라며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다”라고 분회 조직 초기를 떠올렸다.

황훈재 분회장은 “공장의 담장을 넘어 노동자끼리 연대하지는 금속노조 외침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황 분회장은 “경기지부 직속의 독자 지회를 꾸릴 수 있었지만, 금속노조

연대 정신에 동참하고자 지역지회로 들어왔다”라며 산별노조와 지역지회 선택 이유를 털어놨다.

미조직 사업, 노동조합의 최우선 사회연대

황훈재 분회장은 “안산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지역지회가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이고 많은 제조업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조직률은 매우 낮죠. 우리가 금속노조에 가입해보니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분석했다.

황 분회장은 “노동조합을 먼저 경험해 본 노동자들이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필요성을 알리고 노조 가입을 돕는 일이야말로 노동조합의 최우선 사회연대사업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양피스톤분회 간부들은 “금속노조 가입 준비부터 지역지회와 많은 동지가 도와줬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황 분회장은 “처음 공장 정문에서 선전전을 하던 날, 같이 현수막 잡아주던 금속 조합원들을 절대 잊을 수 없다”라며 가입 당시를 회상했다.

동양피스톤분회는 2020년 사업장 교섭 요구로 ‘지역공동체 상생기금 조성’을 내놓을 계

획이다. 황 분회장은 “공감하는 조합원들이 있지만 반대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회사나 노동조합은 그때그때 위기를 막는 데 급급하면 안 된다.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혼자 살고자 한다면 오히려 고립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 '코로나 19' 대응 정책 요구해야

황훈재 분회장은 요즘 물량 문제로 고민이 많다. 한국 자동차 엔진 피스톤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양피스톤도 코로나 19 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전체 매출 절반을 차지하니 충격이 크다. 해외 주요 납품사가 있는 미국과 유럽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수출이 아예 중단됐다. 생산량이 코로나 19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부 공정은 휴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수 물량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마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 조합원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회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하반기에 피해가 제대로 현실화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가 기업 지원을 위해 많은 돈을 풀었다는데, 노동자 생계비나 고용유지로 연결되고 있진 않습니다.”

분회 간부들은 “코로나 19 핑계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라며 분노했다. 동양피스톤을 비롯한 금속노조 대다수 자동차 사업장에서 물량 감소에 따른 임금 삭감과 일자리 위협을 겪고 있는데 금속노조 움직임이 딱히 없으며 이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분회 간부들은 “실제로 국가경제와 산업이 코로나 19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며 “결국 개별 기업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장별 상황을 시급히 조사하고 즉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합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황훈재 분회장은 “정부의 기업 지원 방안 발표 이후 금속노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답답했다”라며 “지금이야말로 금속노조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제 역할을 강력히 요구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상황이 건잡을 수 없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금속노조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훈재 분회장은 “노동자·기업·산업에 대한 금속노조의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금속노조가 책임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습니다. 고민과 행동이 필요할 때, 동양피스톤 분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진상규명·명예회복, 4.3 특별법 전면개정부터”

4.3 민중항쟁 72주년 전국노동자대회 코로나 19로 취소 ... 대표단 참배, 교육영상 제작 배포

제주 43항쟁 72주년을 맞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 민중의 항쟁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과 각 산별노조연맹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43 민중항쟁 72주년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와 집단 참배, 집단 평화 기행을 취소했다. 민주노총은 4월 3일 17시 43평화공원에서 대표단이

참배하고, 교육영상을 제작, 배포해 조합원들에게 항쟁 정신을 알릴 계획이다.

금속노조 통일위원회는 4월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속노동자는 43항쟁 일흔두 돌을 맞아 ‘제주 43 특별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한다”라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43 특별법 전면개정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 통일위는 “다가올 21대 국회는 무엇보다 먼

저 특별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4월 2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제주 민중이 72년 전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에서 통일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열망해 봉기했던 것처럼, 43항쟁의 완전한 해결의 길은 한반도의 항구 평화와 자주 통일 실현이라고 굳게 믿는다”라고 선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4월 1일, 부당해고 1년 ... 복직 투쟁, 청원경찰법 개정 투쟁, 전국 순회투쟁 이어나갈 것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한 지 4월 1일로 1년이다. 청원경찰법을 지키라는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에 대우조선해양은 해고로 답했다. 사측은 여전히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힘들지만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왔다.

청원경찰법 모든 조항이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접고용을 전제로 짜여 있다. 청원경찰법 5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 즉 대우조선해양이 임용해야 한다. 시행규칙 8조는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시행령 19조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다. 위임의 범위를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해 고용까지 도급하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다.

청원경찰법상 직접고용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청원경찰법에 이를 위반했을 때의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이갈



은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했고, 1년 전 청원경찰 스물여섯 명을 부당해고했다.

2019년 6월 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허용된다면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청원경찰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판단했다.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판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9월 24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었다.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심판사건의 공익위원장으로 직접 참석해 내린 판정이었다. 중노위는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정이 미칠 사회 파급력을 차단하고, 대기업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사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조합원들은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며 지금까지 투쟁을 계속해왔다.

우리 분회는 부당해고 1년을 맞이하며 “대우조선

해양은 청원경찰법을 지켜라”, “대우조선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라” 라는 우리의 요구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고용돼 현장에서 돌아갈 때까지 끈질기게 싸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더는 재벌 대기업이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명명거리지 못하도록 청원경찰법 보완, 개정에 나설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같이 청원경찰을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순회하며, 불법을 폭로하고 잘못된 현실을 알리, 청원경찰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다.

사용자만 권리를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노동자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는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과 연대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